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다양한 ‘그린 뉴딜’로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비전 달성해야

지구온난화로 잦은 기상이변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배출 중립’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현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힘든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기후비상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와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그린 뉴딜’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달성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고,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7년에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서울시의 목표인 2030년 40%의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기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서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 ‘그린 뉴딜’ 핵심사업은 노후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

기존건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총량제’ 도입과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노후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복지 개선과 민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gram)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했던 민간건물 BRP 용자지원의 대상과 규모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등 위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도 서울시 그린 뉴딜의 주요 영역

주행거리가 높은 상용 차량을 시작으로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주행거리 혹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도입,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배출제로 구역, 녹색교통 마일리지 제도 등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에 치우친 도로의 구조와 공간 배분을 개선하여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탄소배출 중립에 이바지하게’ 폐기물관리시스템 정비·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일회용 제품포장재 저감,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해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사용·업사이클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재사용·업사이클 센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태양광 신기술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스마트에너지도시 기반도 조성

2050년 5GW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모든 건물을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경량 태양광 등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 의무 설치 건물용 연료전지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소형 연료전지의 경제성과 가동률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슈머, 가상발전소,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사업을 확대하여 스마트에너지시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 전담조직 설립 등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강화, 시민 동참 유도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정책을 통합하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을 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기후위기대응 전담조직, 예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환경부시장을 신설하여 부서별로 진행되는 기후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업의 기후위기행동 리더십 프로그램, 시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 실행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